

■ 관외경작자 1만3천여명...광주·전남 직불금 파문 커지나

부당 수령 파문 農道 강타

◇광주·전남지역 관외경작자=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경작자는 광주 8천188명, 전남이 5천447명 등 총 1만3천64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적어도 20~30% 정도인 3천여명 정도가 쌀 농사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직업적인 농민이 아닌 이상 타 지역에 있는 자신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에 농지를 소유한 광주지역 관외경작자와 전남지역에서도 인근 지역이 아닌 거리가 먼 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관외 경작자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용도 변경된 농지서도 직불금 불법 수령=논에서 주거용지나 공장용지 등 다른 용도로 변경된 농지를 경작중인 농지로 속여 직불금을 수령한 30필지(193만원)가 적발됐다.

전남도가 지난 9월 시·군에 대한 쌀 직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농지가 있는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농사를 짓는다며 '쌀 소득 직불금'을 수령한 광주·전남지역 관외경작자가 모두 1만3천645명에 이른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는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관외경작자의 대부분이 현지에 거주하는 농민이나 친인척에 임대해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상당수의 직불금 부당 수령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장용지서도 수령' 불법 사례 속속 드러나

자경확인서 부실감독 책임론 부상할 듯

불금 관련 감사를 실시한 결과, 영광군은 지난해 마을회관 설립 목적으로 전용된 영광읍 무령리 8필지에 대해 현장 확인없이 52만8천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담양군도 축사 신축 목적으로 전용된

용면 두장리의 7필지 논에 대해 60만원을, 나주시는 골재채취 등의 목적으로 전용된 15필지에 대해 80만원을 현장 확인없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번 직불금 부당 수령자들이 모두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 고소·고발

하지 않고, 수령액만 환수했으며, 해당 시·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담당 공무원의 묵인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경확인서 위조 우려=쌀 소득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경확인서가 필수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 관외경작자의 상당수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자경확인서 부정 발급 파동도 예상된다.

자경확인서는 농지가 있는 지역의 이장 등이 발급한다는 점에서 부정 발급이나 부실 발급의 경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자경확인서 부실 발급을 막기 위해 앞으로 보다 확실한 확인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면 산만 바라본 국회의원들

쌀 직불금 개정 3월 국회 제출...중요성 간과한 채 방치

쌀 직불금 개정안을 포함한 정부 입법계획이 올해 3월 국무회의와 국회에 공식 보고됐으나 누구도 법제정의 중요성을 주목하지 못한 채 10월에서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3월 각 부처별 입법계획을 취합한 '2008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에는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었다. 또 이 같은 입법계획은 지난 3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됐고, 똑같은 내용이 3월31일 국회에 제출됐다.

입법계획상 직불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불금 지급상한 설정, 부당신청자 제재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이 골자였으며, 쌀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피해와 관련없는 자는 신규진입을 배제하고 농업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또 직불금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

기'로 분류돼 있었고, 추진일정상 법제처 제출 시기는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시기는 '8월 31일까지', 시행시기는 '9월 1일'로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직불금 개정안이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 어디에서도 직불금 개정안을 주요 법안으로 다루어 한다는 지적은 제기되지 않았고, 국회 원구성 지연,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의 이슈에 묻혔다.

그 사이 직불금 개정안은 입법계획상 법제처 제출시한보다 3일 늦은 지난 7월3일 법제처에 제출됐다. 이후 두달간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12일과 같은 달 17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차례로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7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 관계자는 "직불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됐고 작년말 정기국회 과정에서 처리될 것 같지 않아 올해 3월 마련된 정부 입법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작년 3월 靑 요청 직불금 감사 앞당겨"

감사결과 靑 상황실장에 사전보고

감사원이 지난해 3월초 청와대 실무라인의 협의 요청을 받고 당초 9월 실시할 계획이었던 쌀 직불금 감사를 3월로 앞당겨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5월 감사결과 확정 이후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 민정수석실, 농어촌 비서관에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현황을 포함한 감사결과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작년 7월 직불금 감사결과가 비공개로 결정되기까지 청와대의 개입이나 지시가 없었다며 감사위원회에서 순수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직불금을 감사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3월초 청와대 농어

촌비서관실에서 감사계획을 앞당겨 줄 수 있느냐는 협의요청이 들어왔다"며 "이에 따라 감사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해 3월21일부터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실무라인의 요청은 청와대 지시사항이 아니었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항도 아니었다"고 강조한 뒤 "농촌소득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예산수입 등 2008년도 예산을 세우기에 앞서 빨리 감사를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해 3월에 감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감사원은 작년 5월15일 감사를 종료한 뒤 당시 제1사무총장과 담당 국장이 6월 15일 청와대 이호철 국정상황실장에게 직불금 부당수령자 현황이 담긴 감사결과를 보고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농어촌비서관에게도 유사한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 직불금 수령 의원 3명 조사"

박순자 최고위원 "문제 있다면 출당보다 더한 조치"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은 19일 일부 당 소속 의원들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과 관련, "지금까지 파악된 사람은 3명이며 조사중에 있다"면서 "당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조만간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국민정서에 이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불금에 대해서 억울한 분들도 있고 분류를 해야겠지만 당 소속 3명이 거명됐는데 당 윤리위원회나 최고위원회 협의에서 실기(失機)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쌀 직불금 문제를 조사한 결과, 도덕적 문제가 있다면 출당보다 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거기에는 선술적이든 비례적이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직자는 단호하게 그 죄에 대해 책임지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고 (부당 수령 직불금) 100% 환수조치해 농민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부당 직불금 신청 의혹과 관련, "참 답답한 심정"이라며 "본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말로 대신하겠다"며 우회적으로 자진 사퇴를 언급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정감사 '무용론'에 대해서 "발언시간이 상당히 제한돼 3시간 기다려 7분 발언하는 등 이래서는 개선책이 나올 수도, 따질 수도 없다"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감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격년제로 한다든지 미국처럼 상시 소위를 열어 끊임 없이 토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나라당 박순자(왼쪽) 최고위원과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직불금, 대북 문제 등 당내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면서 "이제 국감에 대해 심도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교육제도 개선과 관련, "수월성 교육 강화가 당의 입장으로 정책적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라며 "사교육비 광풍이 불어서 안되고 획일적 편중과 교육으로

인재육성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중 설립 논란에 대해 "여러 점을 감안해 볼 때 사교육비를 잘 다스리는 게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새로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세 위원급 교수진과 36개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1월 3일 (주,아) 주부반, 성인반 **국비무료 재직자반** 고용보험재직자 교육비환급 **퀴 무료** 선착순 60명
 처음시작하신분을 위한 기초이론 강좌 연회원 등록시 선착순 50명 수강료 특별할인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로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 학정이전, 오차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롬빌딩 4층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SCU한의대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 44년 전통 합격률 1위
 ● 본원출신 전국수석 (승은영님 평균 96.7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 11월 3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광주고시학원
 직장인을 위한 교육보험 환급과정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F
 국비무료 **재강합격** **점단원** ☎ 971-0002 (구버너로 합민빌딩 경주은행 4F)

=전통47년! 전국 최대 합격자 배출, 명교수진의 환상의 강좌(직접확인요)=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 **직통 행정고시관법검찰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관정전호지방술** ● 30~40대 주부특별반모집 ● -합격설명회, 매일09~19시까지-

'09년 시험은 지금부터 **개강** **합격 회원 모집**
 ● 대목요일 2면이름: 9급 국가지 4월 중순, 7-9급 지방지 5월하순, 7급 국가지 7, 8월 시험 ※ 내년부터: 연임상한 없음(대,생,인,전,신,분,노,장)
 ● 11월 1일(주,아간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 6개월: 90만원 (교재17만원 포함) ● 주·야간반+기초(英·國) 무료특강 ※ 수강료가 저렴, 필수합격 확신함.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